勞動價値論의 基本槪念과 價値形態分析(1)

柳 東 民

勞動價値論이 유의미한 경제분석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구성하는 기본적 개념들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글에서는 抽象勞動·同質勞動·社會的 勞動 등의 개념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 배후에 同質化의 論理와 社會化의 論理라는 두 가지 서로 구별되는 논리가 존재함을 밝힌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價値形態分析의 의미를 재검토하고, 그것을 社會化論理의 전개과정으로 파악하는 기존의 이해방식이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1. 問題提起

일반적으로 價値形態論은 스미스나 리카도 등의 고전학파 가치론과 맑스의 가치론을 구별해주는 특징적인 측면으로서 맑스 자신에 의해서는 물론,(2) 맑스 이후의 맑스경제학자들에 의해서도 누차에 걸쳐 강조되어 왔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들은 『資本論』 제1권의 해당 부분에 대한 독해를 중심으로 하는 훈고학적 논의에 기초하여 그 자체의 논리적 일관성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설사적 연구로서는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실천적 도구로서의 가치이론의 확립이라는 과제에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資本論』의 일관성을 찾아내는 것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가치론이 자본주의 사회를 파악하기 위한 유용한 분석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성하는 몇 가지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기본개념들의 규정에 기초하여 노동가치론 내에서 가치형태분석이 차지하는 위치를 究明함으로써 그 이론적 의의 및 한계를 분명히 하는 데에 있다.

노동가치론이라는 명칭이 가치의 궁극적인 원천을 노동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

(1) 이 글의 초고를 읽고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匿名의 審査委員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물론 내용에 관한 모든 책임은 필자에게 있다.

(2) 자주 인용되는 다음과 같은 서술이 대표적이다. "고전파경제학의 근본적인 결함의 하나는 상품〔특히 상품가치〕의 분석으로부터 〔가치를 교환가치로 되게 하는〕 가치형태를 찾아내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있다"〔Marx(1989, p. 101)〕.

자명하다. 그런데 이 때의 '노동'은 일상적으로 이해되듯이 명료한 개념만은 아니며, 抽象勞動·同質勞動·社會的 必要勞動 등의 다양한 개념으로 분화되면서 논의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2절에서는 먼저 이들 개념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 배후에 同質化의 論理와 社會化의 論理라는 두 가지 서로 구별되는 논리가 존재함을 밝힌다. 3절에서는 이에 비추어 가치형태분석의 의미를 재검토하고 특히 그것이 사회화논리의 전개과정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작업은 기본적으로 拙稿(1994)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拙稿(1994)에서 筆者는 가치와 가격의 양적 연관이라는 문제를 다루면서 노동시간·가치·가격의 次元(dimension)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구분을 엄밀하게 수행하지 않은 채 Lipietz(1985) 등의 '勞動時間의 貨幣表現' 개념을 실증분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이 글 자체는 매우 추상적인 수준의 이론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분석의 논리적 기초를 준비하기 위한 작업으로서의 意義를 갖는다.

2. 抽象勞動·社會的 勞動·同質勞動

가치형태분석과 관련하여 抽象·具體勞動 또는 私的·社會的 勞動 등의 개념쌍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의 논의는 이들 개념을 명확하게 재규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런데 일단 노동가치론을 수용하는 입장만으로 논의대상을 좁혀 보면, 다른 문제들에 관한 의견차이에도 불구하고 가치실체가 抽象勞動(abstract labour)이라는 명제만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추상노동에 대한 견해의 가짓수는 가치이론의 다양한 유파의 수 만큼이나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추상노동 자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주제이다.(3) 이 글의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핵심적인 쟁점은 추상노동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에만 고유한 역사적 개념인가 그렇지 않으면 인류사회 일반에 적용가능한 超역사적 개념인가라는 문제, 그리고 추상노동과 사회적 노동 및 동질노동 간의 상호관계는 어떠한 것인가라는 문제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

(3) 사실 맑스의 原典도 읽기에 따라서는 相反되는 논리를 주장하는 경우조차 있으며, 추상노동에 관한 어느 하나의 견해만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추상노동 개념에 관한 문헌검토로는 李相憲(1994)을 참조하라.

먼저 추상노동의 개념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해 보자.

추상노동이 그야말로 "生理學的 意味"[Marx(1989, p. 58)]에서의 에너지의 지출 또는 다른 어떤 의미에서 超역사적인 개념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본주의 사회에만 고유한 개념인가라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抽象'(abstraction)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적·역사적 상황이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로부터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가치실체가 추상노동이라는 것은 맑스의 경제분석의 출발점을 이루는 하나의 公理(axiom)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경제학, 보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공리는 궁극적으로는 연구자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4) 물론 다른 가능한 공리 대신에 굳이 특정한 공리가 채택되는 이유는 현실 속에서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때 '현실'이란 경제학이 분석대상으로 삼는 것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최초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problématique) 자체가 이미 공리의 자기방어기제를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인 분석대상이 인간의 무한한 욕망에 비해 희소한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배분에 관한 문제로 설정된다면, 공리는 인간과 자원(또는 자연) 간의 관련에 대한 어떤 원리(예컨대 경제주체의 합리적 행동을 통한 만족극대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資本論』 제1권의 첫 문장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맑스의 政治經濟學批判의 대상은 "상품의 방대한 집적"으로 이루어진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이와 같이 분석대상을 노동력이 상품화되는 자본주의 사회로 特定化한다면, 당연히 추상노동이라는 개념은 자본주의의 현실에 고유한 어떤 특성 그 자체 또는 그것으로부터 도출되는 무엇이어야 한다.(5)

이제 우리는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에 직면한다.

첫째, 노동력의 상품화라는 것은 적어도 노동가치 또는 그 어떤 가치 개념과도 독립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명제임에 유의하자. 즉 문제는 '노동력'이라는 개념의 정의(또는 노

---

(4) 方法論的 道具主義를 채택하는 입장에서는 이론체계의 公理 또는 模型의 기본가정은 實用的 觀點에서 취사선택가능한 대상으로 이해한다. 즉 어떤 가정을 선택함으로써 모형을 數理化하기가 쉬워진다거나 경험적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진다는 것 등의 이유만으로 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도구주의적 방법론 자체도 특정한 이론체계의 기반이 되는 역사적 맥락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 자체를 미리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중요한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5) 물론 경제학의 분석대상을 보다 광범위하게 상품생산사회 일반으로 설정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가치 개념이 前자본주의 사회에까지 적용된다는 엥겔스의 견해라든가 이른바 冒頭商品이 단순상품생산사회의 상품을 의미한다는 주장 등이 이를 보여준다.
한편 가치론이 반영해야 할 자본주의 사회의 고유한 특성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가치판단이 개재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으로는 Hunt(1983)를 참조하라.

동력과 노동의 구분) 및 상품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며 반드시 특정한 가치 개념이 전제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6) 바꾸어 말하면 노동력의 상품화는 논리적으로 추상노동에 선행하는 개념 또는 명제라는 것이다. 『資本論』에서 노동력의 상품화가 剩餘價値의 秘密을 설명하려는 순수하게 논리적인 필요에서 먼저 제시되고 난 이후에도 거듭 역사적인 설명(이른바 始初蓄積)을 통해 보완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을 노동력의 상품화 이외의 것으로부터 구하지 않는 한, 추상노동 개념은 그 자체 내에 노동력 상품화의 계기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추상노동이 가치실체인 동시에 노동력 상품이 추상노동 개념의 계기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면, 노동력 그 자체의 가치를 규정하려는 시도는 循環論法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노동력이 상품이라면 가치를 가져야 하고 그 가치의 실체는 어디까지나 추상노동이어야 할 터인데, 추상노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논리적으로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사실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惡순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동력 상품의 가치도 하나의 定義(또는 公理)로서 도입되어야 한다.(7) 이렇게 생각할 때, 노동력의 等價交換으로부터 출발하여 착취의 존재를 논증하려는 『資本論』 제1권의 논리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小幡(1988, p. 161 이하) 참조]. 즉, 원래 그 크기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개념인 '필요노동'을 고정된 크기로 설정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잉여노동'의 존재에 의해 착취를 객관적·수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思考는 문제의 핵심이 잉여가치 抽出의 구체적인 樣相을 분석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간과하게 만든다.

결국 추상노동은 노동력이 상품화되는 사회에만 고유한 범주라는 우리의 주장은 두 가지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경제학의 대상은 초역사적인 인간과 자연간의 물질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맥락을 갖는 인간 對 인간의 사회관계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역사유물론으로부터 얻어지는 理論的 立場이다.

---

(6) 최근 정운영(1994)과 이채언(1994)의 논쟁에서 상품 개념이 먼저냐 가치 개념이 먼저냐라는 논점은 이러한 의미에서 중요하다. 다른 논점들에서의 격렬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양자 모두 상품이 가치에 선행하는 개념이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7) 노동력 가치를 임금재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화폐임금률에 대응되는 가치량으로 정의하는 拙稿(1994)의 규정방식은 방법론적으로는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참고로 앞에서의 가치실체 논의와 관련하여 생각해보면, 소비자의 주관적 효용에서 가치실체를 찾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노동력 상품론이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노동력이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그 대가로 효용의 원천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화폐를 획득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이다.

둘째, 예컨대 효용가치가 아니라 노동가치를 立論으로 삼는 한, '노동' 개념은 노동력의 상품화라는 사실과 논리정합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때의 '노동'은 자체 내에 상품으로서의 '노동력' 규정을 중요한 계기로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8)

추상노동이 초역사적인 개념이라 생각하는 견해들의 공통점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논리를 前자본주의 사회에 回顧的으로 投射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맑스가 가치실체로서의 노동을 인간과 자연간의 물질대사라는 '自然主義的' 맥락에서 도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Lippi(1979)의 해석이 맞다면, 그것은 경제학의 출발점 자체를 인간과 인간의 사회관계로부터 잡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문제인식과 부합되지 않는다. 또는 추상노동을 '인간노동력 일반의 지출'로 이해하거나 사회적 노동배분의 機制로 보는 견해〔李相憲(1994)〕는 동등한 인간노동력의 배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야 비로소 적용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노동 일반'이라는 개념의 도출에 실패한 원인에 관한 맑스의 언급〔Marx(1989, pp. 75-76)〕에 잘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고정되고 그에 맞추어 직업도 고정되며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한 사회에서는 사회 전체의 노동력을 다양한 분업연관 속에 위치지워 배분한다는 사고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신분의 결정, 따라서 노동력의 배분을 계획적으로 통제하는 어떤 존재를 상정하지 않는 한 사회적 노동배분이라는 개념을 前자본주의 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사회적 노동배분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계획·통제하는 유일한 실체가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각 사회구성원들의 노동이동의 자유를 전혀 침해하지 않는, 이론적으로 완벽한 사회주의 사회가 존재한다면 문제는 달라질 것이다. 그 경우에는 물론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이질적인 구체노동들을 동질적인 노동으로 환원해주는 계수를 중앙계획당국의 '권위'에 의해 또는 '全人民的 合意'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여전히 추상노동 개념은 적용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노동력 상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더 이상 증명하거나 反證하기 어려운 理論的 前提라 할 수 있다.

---

(8) 이 글과 마찬가지로 노동력 상품화가 추상노동 개념의 전제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윅스는 이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한다.
"…… 소상품생산 …… 의 조건 하에서는 설사 모든 생산수단이 화폐화된다 하더라도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상품은 그 가치대로 교환되지 않는다. 이것은 그렇게 생산된 상품들에 투하된 노동시간의 일부는 여전히 구체노동이기 때문이다. 생산에 지출된 산 노동은 …… 화폐화되지 않으며 따라서 교환에 의해 규준화되지 않는다"〔Weeks(1981, p. 36)〕.
다만 우리가 강조하려는 것은 가치실체가 추상노동이라는 공리를 유지하기 위한 이론적 정합성의 측면임에 반해, 윅스는 보다 정통적인 입장에서 노동력 상품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추상노동의 양이 측정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런데 추상노동은 구체적인 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노동에 공통된, 일반적 속성만을 뽑아낸 개념이기 때문에 정의상 동질화의 계기를 포함하고 있다. 즉 추상노동공간은 동질적이며 동일한 단위로 잴 수 있어야(commensurable) 하는 것이다. 이는 추상노동이 양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9) 만약 추상노동이 가치의 실체일 뿐 양을 가질 수 없는 것이라면 해결책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이 실체에 의해 표현되며 양으로 측정가능한 다른 개념(가령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을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추상노동은 본질이고 가격이 그 표현이라거나 좀더 극단적으로 화폐 그 자체가 추상노동이라고 주장하는 방법이다[Reuten and Williams(1989)]. 그러나 後者는 가치 개념 자체를 글자 그대로 불필요한(redundant) 것으로 만드는 난점에 빠지고 만다. 왜냐 하면 추상노동이 양을 가질 수가 없고 오직 가격만으로 표현되는 것이라면 질적으로는 물론 양적으로도 가격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의 가치가 설 자리는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前者의 경우는 추가적인 개념이 도입되어야 완결된 논리구조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론으로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에 직면한다. 가령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이라는 규정이 구체노동 또는 물리적 노동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한, 제3의 또다른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론적 필요에 따라 간접적으로 추상노동은 양을 가져야함을 알 수 있다.

추상노동의 양은 추상노동 개념 내에 함축된 同質化(homogenization)의 論理에 의해 결정된다. 동질화과정의 현실적인 기초는 직업선택의 형식적 자유가 주어짐에 따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가능성(mobility) 및 상품교환의 확대에 의해 강화되는 노동의 多才多能性(versatility)에서 찾을 수 있다[이채언(1990)]. 물론 동질화는 자본주의적 상품교환의 반복을 통해 경향적으로만 실현된다. 모든 노동이 어떤 감추어진 과정을 통해 처음부터 동질화된다고 가정하는 것(10)은 분명한 오류이지만, 동질화의 논리가 없는 추상노동을 상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무의미하기조차 하다. 동질노동을 선험적으로 배제하는 논의들이 가치 개념의 불필요성을 주장[Bowles and Gintis(1977)]하게 되거나, 사실상 가격이 가치를 규정하는 것으로 주장[Krause(1982)]하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결국 추상노동과 동질화된 노동은 자본주의 사회에 관한 한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개념인 것이다. 즉 추상노동은 '자본주의적 상품교환을 통해 동질화되는 노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資本論』의 서술로부터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인용문에서 가치의 실

(9) 예컨대 이채언은 추상노동은 質도 量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이채언(1994, p. 306)].
(10) Krause(1982)는 이러한 思考를 '동질노동의 도그마'라고 불렀다.

체는 동등한 인간노동이며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추상노동인 것이다.

> …… 가치의 실체를 이루는 노동은 동등한 인간노동이며, 동일한 인간노동력의 지출이다. 상품세계의 가치로 표현되는 사회의 총노동력은, 비록 무수한 개인단위의 노동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하나의 동질의 인간노동력으로 간주된다. 각 단위의 노동력은, ……, 서로 다름이 없는 동일한 인간노동력이다[Marx(1989, p. 48)].

이제 私的 勞動과 社會的 勞動의 구분을 생각해 보자.

사회적 노동이라는 개념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無政府的 性格을 반영하는 개념으로서 추상노동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 歷史性을 띠는 개념이다.(11) 즉 非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적 노동은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인정을 받기 때문에, 사적 노동과 사회적 노동의 구분이 사실상 불필요한 것이다. 어떤 노동의 생산물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으로서 인정될 때 그 노동은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이를 앞에서 언급한 동질화의 논리와 구별하여 社會化(socialization)의 論理라 부를 수 있다.

사회화의 대상은 일차적으로는 해당 상품이 가지고 있는 사용가치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노동을 투입하여 어떤 물건을 생산하였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것이라면 그 생산물은 사회화에 실패하는 것이다.(12)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가치와 사용가치를 다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가치가 승인받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가치가 승인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교환의 논리가 전면화함에 따라 사용가치만 있고 가치는 없는 재화나 서어비스도 시장에서의 판매를 통해서만 사회적 유용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勞動의 産物이 아닌, 따라서 리카도가 예외로 치부하였던 골동품이나 토지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자본주의 이외의 사회를 생각해보면, 모든 인간의 노동이 동등한 노동으로 간주되지 않으면서도 해당 노동의 산물은 사회적 유용성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회화의 논리와 추상노동 개념의 기초를 이루는 동질화의 논리는 상호독립적이라는 사실에 留意하

---

(11) 굳이 '일정 정도'라는 한정을 가하는 것은 노동력이 상품화되지 않는 단순상품생산사회에서도 사적 노동과 사회적 노동은 구분되기 때문이다. 물론 단순상품생산이 역사적으로 實在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상정된 모형인가라는 논점이 존재하지만, 여기에서는 일단 論外로 한다.

(12) 다음과 같은 맑스의 서술은 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 상품은 가치로서 실현될 수 있기 전에 먼저 자신이 사용가치라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왜냐 하면, 상품에 지출된 인간노동은, 그것이 타인에게 유용한 형태로 지출되는 경우에만, 유효하게 계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노동이 과연 타인에게 유용한가 그렇지 못한가 …… 는 오직 상품의 교환만이 증명할 수 있다"[Marx(1989, p. 108)].

여야 한다.

결국 동질화의 논리와 사회화의 논리는 자본주의적 상품교환을 해석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軸인 것이다. 양자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으면, 가치를 가격에 의해 설명하는 잘못을 범하거나 가치 개념이 필요없다는 잘못된 주장으로 이끌어진다. 정운영(1994)은 추상노동을 간접적으로 사회적인 노동이라 정의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화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한다는 의미에서만 정당할 뿐이며, 추상노동을 사회적 노동의 下位範疇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러한 정의 때문에 가치 개념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어버리는 난점이 발생하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價値의 創造'와 '價値의 決定' 간의 구분이라는 불필요한 이론적 장치가 도입되고 있다.(13)

한편 동질화의 논리와 사회화의 논리는 각각 생산관계 및 개별 주체의 재생산과 관련되며, 그것이 관철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교환을 통한 간접적인 사회화의 논리는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反경향을 수반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관철되는 반면, 동질화 경향은 反경향에 의해 상쇄·저지되면서 현실에서 반드시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14)

먼저 사회화는 개별 주체의 재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이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상품생산자(자본가 또는 독립상품생산자)는 자신의 생산물을 시장에 내다 팖으로써 사회적 승인을 얻어야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축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른바 '목숨을 건 도약'인 것이다. 개별 노동자의 재생산 또한 마찬가지 논리로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할 수 있는가, 즉 '사회화'에 성공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의존한다.(15) 반면 동질화

(13) 사회화의 논리와 동질화의 논리를 비교적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은 리피에츠인데, 그는 교환을 통해 해결되는 모순은 '사용가치/가치' 또는 '구체노동/추상노동'이 아니라 '사적 노동/사회적 노동'이라 주장한다[Lipietz(1985, p. 163)]. 그러나 그도 '화폐의 노동등가물' (labour equivalent of money) 개념을 이용한 실제적인 분석에서는 혼란에 빠지고 있다. 이 개념에 따르면, 판매에 성공한 생산물에 투입된 모든 노동시간은 '사회적 노동'인 동시에 '추상노동(따라서 동질노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14) Carchedi(1991, pp. 4-5)는 "실현되는 대부분의 현상이 하나의 점 또는 영역을 향해 모여드는 운동"을 '제1유형의 경향' (tendency of the first type), "경향과 反경향이 교대로 실현되는 주기적 운동"을 '제2유형의 경향' (tendency of the second type)이라 불렀다. 이러한 용어법에 따르면, 사회화는 제1유형의 경향이며 동질화는 제2유형의 경향이라 할 수 있다.

(15) 이 글의 草稿를 읽고 匿名의 審査委員은 독점적 경쟁 하에서의 製品差別化라든가 각 개인들이 자신의 각기 다른 특성(아마도 노동력? — 筆者)을 시장에서 팔기 위해 노력하는 것 등을 例로 들고, "상품교환은 결과적으로 상호 다르기 때문에 필요해짐을 승인하는 과정이지 같기 때문에 승인하는 과정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자본주의의 논리를 동질화의 논리에서 찾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상품교환을

경향은 항상 差別化라는 反傾向을 수반하는 형태로만 나타난다. 노동자계급은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이나 임금, 노동강도 등의 근로조건의 동질화를 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조건의 동질화는 동일한 직무(또는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간의 문제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동질화의 논리'와는 다른 문제이다. 한편 자본은 이윤증대에 도움이 되는 한, 분할통치전략(divide & rule)을 구사함으로써 노동의 차별화를 시도한다.(16) 분단노동시장이라든가 사회적·문화적 요인(性이나 人種 등)에 기초한 차별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국면에 따라서는 차별화 경향이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Roemer(1978)〕 노동의 동질화가 주된 경향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그 자체의 재생산이 생산과정 내에서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조직하는가에 달려 있으며 그러한 조직화의 주도권(initiative)은 기본적으로는 자본가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와 같은 경향과 反경향 간의 충돌은 잉여가치율의 결정과정에 반영된다는 사실이다. 즉 두 가지 경향 간의 모순적인 충돌은 직무의 성질 등과 같은 기술적 요인은 물론 階級間 力關係 형성과정 등과 같은 역사적 요인에 따른 부문별 특수성의 차이에 기초하여 잉여가치율의 불균등한 전개로 나타난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동질화의 경향과 잉여가치율 균등화경향이 같은 것은 아님에 주의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동질화는 이미 고용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서 노동력 상품의 潛在的 使用價値가 그 구체적인 형태와 상관없이 가치형성능력이라는 동일한 내용으로 주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며, 잉여가치율 균등화는 고용계약 이후 노동지출과정 속에서 그러한 능력이 현실적으로 균등하게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와는 달리 노동력의 경우에는 潛在的 使用價値와 現實的 使用價値가 고정적인 비례관계를 갖지는 않는

個別者 對 個別者 간의 완전히 우연적인 관계로 환원시켜 버리지 않는 한, 자신이 생산한 제품의 독특한 유용성을 우선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다른 제품과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현실은 개별 주체들이 스스로의 재생산을 위해 '사용가치 일반'을 인정받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後述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과정은 동질화 과정과는 논리적으로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논리를 동질화의 논리에서 찾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물론 草稿에서 筆者의 서술이 불분명하였다는 점을 전제하여 둔다.

(16) 하이데는 노동자계급의 경향적 동질화과정이 자본의 존재를 위협하기 때문에 자본은 필연적으로 이에 맞서 분열전략, 또는 차별화과정을 관철시키고자 노력한다고 주장한다〔Heide(1993, pp. 274-275)〕. 그러나 만약 노동의 동질화가 생산과정 내에서의 잉여가치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본도 얼마든지 동질화 전략을 채택할 수 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자본이 先驗的으로 어느 한 방향으로의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17) 엄밀하게 말하자면, 일반적 상품의 경우 사회화란 잠재적 사용가치의 현실적 사용가치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노동력의 경우에 이러한 전환은 고용계약이 맺어진 이후의 실제 생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노동가치이론은 가능하지만 땅콩가치이론은 불가능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이상의 논의로부터 사회화의 논리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경우 잉여가치 생산을 둘러싼 계급간의 대립관계가 看過될 가능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른바 '異端的 接近'의 주장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사회화의 문제설정만을 강조하는 논의들이 궁극적으로는 가치 개념의 폐기로 귀결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3. 價値形態分析의 意味와 限界

이제 앞에서의 논의에 기초하여 가치형태분석의 의미를 확인해 보자.

자본주의적 시장교환의 대상이 되는 모든 상품은 반드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을 갖는다. 이것은 우리의 눈앞에 주어지는 자명한 사실일 따름이다. 가치이론이 추구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자명한 가격현상의 배후에 존재하는 실체를 포착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가격의 운동을 설명하는 것이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일정량의 상품이 일정한 가격으로 판매된다는(또는 화폐와 교환된다는) 사실 뿐이다. 이제 A와 B라는 두 가지 상품만이 존재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각각의 가격을 $P(A)$, $P(B)$라 하면, x量의 $A(A_x)$와 y量의 $B(B_y)$는 동일한 크기의 화폐액으로 표현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_xP(A) = B_yP(B) \tag{3.1}$$

우리는 이미 추상노동이 가치의 실체라는 명제는 하나의 公理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따라서 $V(A)$, $V(B)$를 각각 A財와 B財의 가치크기 또는 추상노동의 양이라 하면, (3.1)식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17) 불완전정보의 존재를 지적하고 있는 이른바 '不良中古車(lemon)市場'〔Akerlof(1970)〕이나 本人-代理人 問題로 표현되는 자본시장에서의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대립은 구매자(또는 채권자)의 판매자(또는 채무자)에 대한 지배관계를 내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동력의 교환과는 의미가 다르다. 노동력 상품을 시장에서 구입하여 소유권을 획득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것에 대한 지배관계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수단의 소유와는 달리 생산수단의 소유는 본질적으로 他人勞動에 대한 强制관계를 의미한다는 황태연(1996, pp. 4-5)의 지적은 매우 적절한 것이다.

(3.2) $$A_xV(A) = B_yV(B)$$

그런데 $V(A)$와 $V(B)$는 더이상 자명한 것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A財와 B財의 구체적인 생산과정 내부를 들여다볼 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특정한 형태의 노동(즉 具體勞動)이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 뿐이다. $L(A)$와 $L(B)$를 각각 x量의 A財와 y量의 B財를 생산하는 구체적인 노동이라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를 얻는다.

(3.3) $$L(A) \rightarrow A_x,\ L(B) \rightarrow B_y$$

(3.3)식에서 등호 대신에 화살표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좌변과 우변이 서로 이질적인 단위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18) 예컨대 規模收益特性에 관한 가정이 없이는 (3.3)식의 양변을 일정한 상수로 곱해 주더라도 더 이상 화살표로 표시되는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3.3)식으로부터 결국 (3.2)식은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계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도 兩방향으로의 화살표는 좌변과 우변이 직접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 제3의 실체를 통하여 같은 것으로 간주됨을 나타낸다.

(3.4) $$A_x \leftrightarrow B_y$$

(3.4)′ $$L(A) \leftrightarrow L(B)$$

이미 설명한 동질화의 논리는 (3.4)식 또는 (3.4)′식으로부터 (3.2)식으로의 과정을 의미하며, 사회화의 논리는 (3.4)식으로부터 (3.1)식으로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맑스는 이른바 '蒸溜法'에 의해 (3.4)식에서 (3.2)식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므로, (3.4)식에서 출발하여 (3.2)식을 거쳐 (3.1)식으로 가는 논리연쇄를 상정한다. 즉 원래 상이한 논리인 (3.4) → (3.1)과 (3.4) → (3.2)가 (3.4)→ (3.2) → (3.1)이라는 하나의 順次的인 論理連鎖로 파악되는 것이다. 특히 이를 下向法과 上向法이라는 맑스의 방

(18) 반면에 (3.1)식과 (3.2)식은 等號로 표시될 수 있다. 먼저 (3.1)식에서 $P(A)$, $P(B)$는 A財 및 B財의 單位價格이므로 〔원/물량〕의 次元을 갖는다. 여기에다 물량단위로 표시되는 x, y를 각각 곱해 주면, 〔물량〕*〔원/물량〕 = 〔원〕, 즉 화폐단위의 차원을 갖게 된다. (3.2)식에서도 $V(A)$, $V(B)$가 A財 및 B財의 單位價値라는 점을 고려하면 마찬가지 결과를 얻는다.

법에 따라 정리해 보면, '調査' (inquiry)의 과정에서는 구체노동이 추상노동으로 전환되는 것을 발견하고 '發表' (presentation)의 과정에서는 추상노동의 존재로부터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金秀行(1988, pp. 42-43)〕. 즉 '調査'의 과정은 (3.1) → (3.4)′ → (3.2)이며 '발표'의 과정은 (3.2) → (3.1)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發表'과정에서는 (3.4)′가 탈락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3.4)′와 (3.2)의 관련, 즉 구체노동과 추상노동 간의 관련이 생략되거나 또는 단순화하여 처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 이 부분은 기존의 노동가치이론 내에서 일종의 '연관不明' (missing link)의 상태로 남아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資本論』 제1권 제1장 제3절 '가치형태 또는 교환가치'의 논리전개는 (3.4) = (3.2) → (3.1)이다. 이상의 논의를 도식화하면 〈表 1〉과 같다.

〈表 1〉

	논리전개순서
가치형태분석	(3.4) = (3.2) → (3.1)
동질화과정	(3.4) or (3.4)′ → (3.2)
사회화과정	(3.4) → (3.1)

그런데 가치형태분석의 논리를 〈表 1〉과 같이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가장 먼저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은 (3.1)-(3.4)식의 체계를 가지고 '貨幣形態(IV)'는 물론이고 '展開된 價値形態(II)'나 '一般的 價値形態(III)'를 포괄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19)

이와 관련하여 일견 技術的인 問題인 것처럼 보이는 Morishima(1973)의 지적을 검토해 보자. 맑스는 '상대적 가치형태의 양적 규정성'이라는 제목하에 상품*A*(아마포)와 상품*B*(저고리)의 상대적 가치의 변화를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 검토한 후, "가치량의 현실적 변동은 가치량의 상대적 표현 즉 상대적 가치의 크기에 명확하고 완전하게 반영되지는 않는다"〔Marx(1989, p. 69)〕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3.2)식의 구조로부터 동어반복적일 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Morishima(1973)의 주장이다.

먼저 가치량의 현실적 변동과 그 상대적 표현을 구분하는 것이 同語反覆이므로 무의미한 操作이라는 주장이다. 즉 (3.2)식은 다음과 같이 변형되므로,

(19) 주지하듯이, 『資本論』 제1권의 가치형태분석은 '單純한 價値形態'로부터, '展開된 價値形態', '一般的 價値形態', '貨幣形態'로의 전개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이를 각각 I, II, III, IV 형태라 부르기로 한다.

$$(3.2)' \qquad V(A)/V(B) = B_y/A_x$$

(3.2)′ 식으로부터 두 상품이 등치되는 비율(B_y/A_x)은 $V(A)$나 $V(B)$ 그 자체의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V(A)$와 $V(B)$의 비율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를 일반적인 n財 模型으로 확장하는 경우,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즉 다음과 같은 n개의 식으로 표현되는 표준적인 가치체계 (3.5)에서 각 식의 양변을 l_i로 미분하면 (3.5)′를 얻는다. 여기에서 v_i는 i財의 단위가치이고, a_{ij}는 j財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i財의 양, l_i는 i財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투입량을 나타낸다.

$$\begin{aligned} v_1 &= \Sigma a_{j1}v_j + l_1 \\ &\cdots \\ v_i &= \Sigma a_{ji}v_j + l_i \\ &\cdots \\ v_n &= \Sigma a_{jn}v_j + l_n \end{aligned} \qquad (3.5)$$

$$\begin{aligned} \partial v_1/\partial l_i &= \Sigma a_{j1}(\partial v_j/\partial l_i) + 0 \\ &\cdots \\ \partial v_i/\partial l_i &= \Sigma a_{ji}(\partial v_j/\partial l_i) + 1 \\ &\cdots \\ \partial v_n/\partial l_i &= \Sigma a_{jn}(\partial v_j/\partial l_i) + 0 \end{aligned} \qquad (3.5)'$$

그런데 (3.5)′로부터 i財가 다른 상품의 생산에 전혀 투입되지 않는 사치재나 임금재가 아니라면, 즉 생산재라면 일반적으로 $\partial v_j/\partial l_i = 0$이라 말할 수 없다. 이를 (3.2)′ 식으로 표현하면 $V(A)$ 자체가 $V(B)$의 함수임을 의미한다. 즉 A財가 B財의 생산에 투입물로 이용되는 경우라면 $V(A)$의 증가(감소)는 $V(B)$도 증가(감소)시키기 때문에, '$V(A)$는 변동하는데 $V(B)$가 불변인 경우'라는 맑스의 구분은 잘못된 구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맑스는 (3.5) 또는 (3.5)′에서와 같은 부문간 투입산출관련에 관해 매우 잘 알고 있었음을 문헌검토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예를 들어, Marx(1990, p. 93)], 이를 맑스의 단순한 실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맑스의 논의는 (3.2)식 하나의 문제로서만이 아니라 (3.2)식과 (3.1)식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3.1)식과 (3.2)식의 관계를 고려하는 데에도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먼저 (3.1)식으로부터 $P(B)/P(A) = A_x/B_y$이고 (3.2)식으로부터는 $V(B)/V(A) = A_x/B_y$이므로 $V(B)/V(A) = P(B)/P(A)$를 얻을 수 있다. 즉 상대가치와 상대가격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Krause(1982)에 의해 채택된 방식이다. 물론 그는 가치관계가 等價關係(equivalence relation)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결국 화폐의 존재에 의해

$V(B)/V(A)$와 $P(B)/P(A)$를 정의상 같은 것으로 놓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치실체로서의 추상노동은 하나의 공리라는 우리의 문제인식과 마찬가지로 상대가치와 상대가격이 일치한다는 크라우제의 명제 또한 그의 체계 내에서는 公理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가치와 (시장)가격은 다르다는 문제 또는 價値의 生産價格으로의 轉形問題는 정의에 의해 해소되어 버린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V(A) \rightarrow P(A)$, $V(B) \rightarrow P(B)$이므로 $V(B)/V(A) \rightarrow P(B)/P(A)$임을 보이는 방법이다. 이것은 맑스의 방법인데 형식논리적으로는 앞의 방법과 아무런 차이도 없다. 그러나 맑스의 문제는 왜 상품의 가치가 화폐형태로 표현되는가, 또는 화폐형태의 기원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는 중요한 차이를 갖는다. $V(B)/V(A) = P(B)/P(A)$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가치분석의 외부에서 결정되어 들어오는 상대가격에 기초하여 상대가치를 찾아내는 문제로 귀착된다. 그러나 가치형태분석은 "두 가지 상품의 일정한 양이 서로 등치되는 비율만을 보는"〔Marx(1989, p. 62)〕 데에서 벗어나 질적 연관을 해명하는 데에 그 본질적인 과제가 있다. 즉 맑스는 $A_xV(A)$와 $B_yV(B)$가 각각 $A_xP(A)$ 및 $B_yP(B)$로 표현되는 메커니즘을 구명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결국 가치형태분석은 (3.1)-(3.4)의 체계로 충분히 설명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른바 '蒸溜法'에 의한 가치실체의 도출이 여의치 않다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어차피 두 재화 간의 관련만으로부터 가치 개념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가치형태(I)'에서의 두 상품은 n財 模型의 구성요소로서의 개별 상품이 아니라 일종의 대표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갖고 등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개된 가치형태(II)'나 '일반적 가치형태(III)'에 관한 부분에서 n재의 경우로 분석이 확장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資本論』 제1권의 논리전개상 가장 큰 이유는 화폐성립의 필연성에 관한 논증을 '全面的 交換의 矛盾'이라는 논리에 의해 보완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全面的 交換의 矛盾'은 제2장 '교환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며, 따라서 가치형태론과 교환과정론의 대상과제가 엄밀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이질적인 논의가 삽입되었다는 주장〔홍훈(1994)〕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가치형태분석이 (3.2) → (3.1)에 관한 논의라면 '全面的 交換의 矛盾'은 특정한 가치개념에 의거하지 않고서도 (3.4) → (3.1)의 과정으로 분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전통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가치형태론의 두 가지 논점에 관해 살펴보자.

첫번째 문제는 '좌변과 우변의 非대칭성' 및 그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II형태로부터 III형태로의 이행논리에 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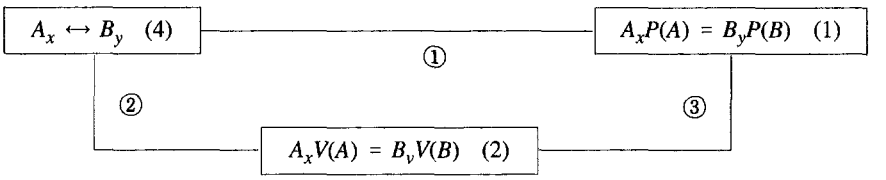
먼저 가치형태분석의 출발점이 실질적으로 (3.2)식에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좌변에 등장하는 상품은 우리가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는 상품 그 자체가 아니라 이미 연구자의 인식과정을 통과한 추상노동의 體化物로서의 상품인 것이다. 예를 들어 단순한 가치형태에서 '상대적 가치형태의 양적 규정성'과 관련하여 "만약 아마포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 2배로 된다면, 아마포의 가치도 2배로 될 것이다"〔Marx(1989, p. 67 — 강조는 인용자)〕라는 서술을 보자. 이 때 '노동시간'을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생산성은 구체적 유용노동의 속성"이며 따라서 "생산성은 〔가치로 표현되는〕 노동과 아무 관계도 없다"〔Marx(1989, p. 57)〕라는 맑스 자신의 서술과도 배치된다. 물론 이것은 이른바 '還元問題'(reduction problem)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되었다는 전제하에 모든 異質勞動을 同質勞動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서술이다. 즉 여기서의 '노동시간'이란 다름아닌 추상노동의 양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추상노동은 노동의 동질화경향이라는 자본주의적 實在에 기초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자명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경제주체들이 직접 관측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등식의 좌변이 추상노동, 우변이 구체노동으로 설정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感知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유용형태의 노동 뿐이기 때문이다.

등식의 양변이 비대칭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은 이미 많은 논자들에 의해 강조된 바 있다.(20) 가장 쉽게 받아들여지는 비대칭성에 관한 해석은 좌변에 놓인 상품소유자의 교환욕구와 우변에 놓인 상품소유자의 교환욕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해석이었다. 이러한 해석이 포착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社會化의 論理'라 할 수 있다. 즉 좌변의 상품소유자와 우변의 상품소유자가 '욕망의 이중적인 일치'(double coincidence of wants)를 통해 교환에 성공하기까지는 어느 쪽의 상품생산에 투하된 노동도 私的 勞動일 뿐이다. 교환이 성립되는 순간 비로소 社會的 勞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추상·구체노동의 경우와는 달리 양변의 어느 한 쪽을 사적 노동, 다른 한 쪽을 사회적 노동에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홍훈(1994, p. 23)〕.

그런데 〈表 1〉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화의 논리는 (3.4) → (3.1)이고 가치형태분석의 대상은 (3.2) → (3.1)이며, 더욱이 兩者가 예컨대 (3.4) → (3.2) → (3.1)과 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논리선상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後者를 前者의 일부분으로 파악하는 것도

(20) Bidet(1989)는 양변이 동일한 실체를 가지며 따라서 대칭적인 성격을 갖는 '가치관계'와 그렇지 않은 '가치표현'을 엄밀하게 구분하였으며, Krause(1982)는 아예 '가치관계'라는 개념 자체가 대칭성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잘못이다. 이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에서 각각의 표현 간의 논리적 연관관계를 편의상 ①, ②, ③의 번호로 표시하였다.



〈그림 1〉

〈그림 1〉에서처럼 두 가지 독립적인 논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文獻上의 근거는 다음과 같은 引用文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 노동생산물은 교환에 의해 비로소 …… 하나의 사회적으로 동등한 객관적 실재 즉 가치를 획득한다 …… 이 순간부터 개별 생산자의 사적 노동은 이중의 사회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한편으로, ㉠ **사적 노동은 일정한 유용노동으로서 일정한 사회적 욕망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총노동의 한 요소로서, 자연발생적인 사회적 분업의 한 분야로서, 자신의 지위를 획득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 사적 노동이 개별 생산자 자신의 다양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각각의 특수한 유용한 사적 노동들이 서로 교환될 수 있으며 ㉡ **서로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 그리하여 ㉠′ **사적 노동의 사회적인 유용성은 노동생산물이 타인에 대해 유용하여야 한다는 형태로 반영되며**, ㉡′ **각종 노동의 동등성이라는 사회적 성격은 물질적으로 상이한 노동생산물들이 모두 하나의 공통된 성질, 즉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형태로 반영된다**〔Marx(1989, p. 93 — 번호 및 강조는 인용자)〕.

인용문의 ㉠ 및 ㉠′와 ㉡ 및 ㉡′는 각각 이 글에서 말하는 사회화의 논리, 동질화를 기초로 한 가치의 표현이라는 논리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적어도 맑스 자신이 노동생산물의 교환이라는 하나의 현실이 두 가지 다른 측면에서 인식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점만은 분명한 것이다.

어쨌든 이상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비대칭성의 문제를 사회화의 논리로 해석하는 것이 용인될 수 없다면, 좌변의 추상노동과 우변의 구체노동이 등호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는 어떤 외생적인 힘의 개입이 없이는 더이상 논리적 전개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좌변과 우변을 서로 바꾸어 놓더라도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즉 핵심적인 문제는 II형태에서 III형태로의 이행이 어떤 논리적 근거를 갖는가라기보다는 오히려 동등한 권리를 갖는 두 가지 형태가 모두 內生的인 展開論理를 갖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여

기에서 논의는 자연스럽게 두번째의 논점으로 옮아가게 되는데, 바로 가치형태분석으로부터 화폐 개념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라는 문제이다.

『資本論』 제1권에서 화폐는 사실상 두 가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그 하나는 동질화된 노동(즉 추상노동)들 간의 연관을 맺어줌으로써 가치를 표현해주는 기능이며, 다른 하나는 유용성의 일반적 인정을 통한 사회화의 기능이다. 한편 화폐는 어디까지나 그 자체가 상품이며 따라서 가치실체를 갖는 것으로 설정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기능 중에서 보다 근본적인 것은 前者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맑스의 텍스트에서 화폐가 상품인 까닭보다 상품이 화폐가 되는 까닭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어렵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21)

그런데 화폐가 추상노동이라는 가치실체를 갖는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즉 상품화폐론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치형태의 自己展開를 통해 화폐의 필연성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화폐가 상품이냐 아니냐는 III형태로부터 IV형태로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인 반면, 우리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이미 II형태에 있어서의 論理展開의 難点이기 때문이다. 흔히 주장되는 바와 같이, 金이 지니고 있는, 화폐가 되기에 적합한 여러 가지 素材的 特性 — 휴대가 간편하고 균질적이며 분할가능하다는 등 — 이 III형태로부터 IV형태로의 이행과정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가치형태분석에서 우변에 놓이는 등가형태에서 유의미한 것은 그것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노동의 양이 아니라, 물리적 형태로 주어지는 그것의 사용가치의 일정한 양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테면 '국가의 권위'에 의해 가치실체를 갖지 않는 임의의 대상이 우변에 놓이더라도 가치형태분석의 논리구조상 金貨의 경우에 비해 더 큰 飛躍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Dixon and Kay(1995, pp. 516 ff.) 참조].

만약 극단적으로 화폐 그 자체가 定義에 의해 抽象勞動이라는 입장[Eldred and Hanlon(1981) 참조]을 취한다면, 모든 상품은 화폐와 교환됨으로써 스스로의 사회적 유용성을 인정받는 동시에 추상노동임도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사회화의 논리 자체가 동질화의 논리를 정의상 내포하기 때문에, 동질화의 논리는 불필요하게 설정된다는 문제에 직면한다. 즉 〈그림 1〉로 설명하자면 ①의 연쇄만으로 충분한 것을 구태여 ②와 ③을 거쳐 迂廻할 필요는 없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화폐가 바로 추상노동이라는 입장은 필연적으로 화폐의 존재를 전제하면서 그것에 特權的인 役割을 부여하는 입장으로 귀

(21) "어려움은 화폐가 상품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왜·무엇에 의해서 상품이 화폐로 되는가를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이다"[Marx(1989, p. 116)].

결될 것이다. 이는 생산의 물적·기술적 조건만 알면 (생산)가격체계를 알아낼 수 있으므로 가치체계를 통한 迂廻는 불필요하다는 新리카도학파의 논리와 그 구조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하다. 단, 新리카도학파가 출발점을 생산현장의 조건(물량체계)에 둠으로써 생산과정에 대한 강조를 유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반면, 이러한 논리구조에서는 화폐가격을 출발점으로 잡기 때문에 생산현장은 완전히 暗箱子(black box)로 처리된다는 점만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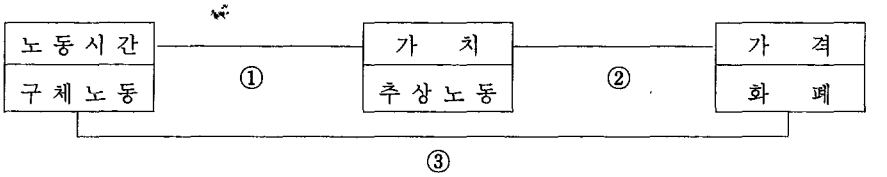
결국 상품화폐론을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간에,화폐의 발생을 가치형태에 의해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II형태에서 발생하는 곤란은 가치형태의 전개방향이 開放性을 그 본질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곤란의 해결방식을 선험적으로 어느 한 방향으로 고정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가치형태분석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화폐가 상품가치의 표현이라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일 수 있을 따름이다.(22) 즉 II형태로부터 III형태로의 이행, 나아가 IV형태로의 이행은 사실상 그 종착점인 貨幣를 어느 정도는 전제한 상태에서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출발점에서부터 화폐가 외생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가치형태분석만으로 화폐가 가치실체인 인간노동 일반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명제를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4. 結 論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가치형태분석이 차지하는 이론적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제 그 결과를 노동시간·가치·가격 범주의 구별과 관련지워 정리해 보자.

노동시간·가치·가격은 각각 자본주의적 생산의 물량체계·가치체계·가격체계에 대응된다. 특히 이 때의 노동시간은 구체적 유용형태로의 인간노동력의 지출을 실제 시간(calendar time)으로 측정한 것을 의미한다. 〈그림 2〉에서 ③은 이와 같은 구체노동의 생

(22) Aglietta and Orléan(1991)은 다른 모든 상품에 의한 '選出-排除'의 논리를 개인들간의 욕망의 대립이라는 사회적 갈등구조로 대치시켜 강조하더라도 이러한 소극적 의미에서의 화폐의 발생은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이들의 시도에서는 화폐가 가치실체로서의 추상노동과 관련을 갖지 않는다라는 명시적인 전제로부터 출발하고 있기조차 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논의는 가치실체의 인정 여부와 사회화 논리의 인정은 상호독립적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는 역설적으로 '가치실체 = 추상노동'이 공리라는 이 글의 입장을 강화해준다고 생각된다.



〈그림 2〉

산물이 화폐와 교환됨으로써 사회적 유용성을 인정받는 과정, 즉 사회화의 논리를 나타낸다. 그런데 이 과정은 가치 또는 추상노동이라는 中間項을 거칠 필요없이 구체노동과 화폐 간에 직접 설정될 수 있다. 한편 ①은 이질적인 구체노동으로부터 동질적인 추상노동으로의 전환과정을 나타내며, ②는 가치와 가격 또는 추상노동과 화폐간의 질적·양적 연관을 나타낸다. 맑스에게 있어 前者는 '抽象' 및 '還元'의 문제였으며, 後者는 가치형태분석 및 '轉形'(transformation)문제의 영역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맑스는 상대적으로 전자의 문제는 소홀히 처리한 반면 후자의 문제를 매우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앞서 지적한 '연관 不明'과 관련이 있다. 학설사적인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노동가치이론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맑스로서는 '抽象' 및 '還元'의 문제를, 예컨대 '蒸溜法'이나 임금률을 참조로 하는 방식 등의 간단한 설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반면 '轉形' 문제는 양적 측면에서의 리카도의 난점을 해결함으로써 노동가치이론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제였고, 가치형태분석은 가치의 질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이론이 갖는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단순히 노동가치론의 논리적 정합성이 아니라 그것의 분석적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비판, 즉 〈그림 2〉로 표시하면 ①, ②의 연관이 필요없이 ③만으로 충분하다는 현대경제학에서의 근본적인 문제제기[예를 들면 Samuelson(1971) 이나 Steedman(1977)]가 이러한 대응만으로 극복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Lipietz(1985) 등과 같이 '勞動時間의 貨幣表現'(또는 '貨幣의 勞動等價物') 개념을 이용하여 구체노동시간과 화폐가격을 직접 연결짓는 논의에서는 〈그림 2〉의 ①과 ②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처리함으로써 사실상 추상노동을 사회적 노동과 동일한 개념으로 만들어버린다. 이 경우 단순히 추상노동과 사회적 노동의 개념규정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석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즉 가치이론에서 상정하는 연관은 '생산성의 변화 → 구체노동시간의 변화 ⟶ 가치량의 변화 → 가격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적 노동을 사실상 추상노동과 동일시하는 논의에서는 이와 역의 연관, 즉 '가격의 변화 → 사회적 노동(또는 추상노동)량의 변화 → 가치량의 변화'라는 연관도 동

등한 권리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환언하면 가격이 가치를 규정한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한편 형태분석으로부터는 가치실체를 도출할 수 없다는 宇野學派의 주장은 이 글의 문제의식에 가장 근접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관 不明'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노동가치이론의 全체계는 얼마든지 달라진다. 예를 들어 Itoh(1988)와 같이 單純·複雜勞動의 구분과 무관하게 모든 노동은 동일 시간에는 동일한 가치를 창조한다는 가정을 채택한다면, 〈그림 2〉의 ①에 관한 논의가 실종되어버리며 사실상 ②와 ③이 동일한 과정으로 파악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는 가치실체로서의 추상노동을 중간항으로 설정하는 것은 公理라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가치형태분석의 의의는 추상노동과 화폐 간의 질적 연관을 整合的으로 구성하는 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치형태분석을 통해 화폐의 발생에 관한 인류학적 설명을 제시하거나, 마찬가지 이야기지만 I형태로부터 IV형태로의 발전을 역사적인 과정에 대응시켜 파악하는 것은 무의미함을 알 수 있다. 가치형태분석의 진정한 과제는 이론적으로 설정된 추상노동 개념을 향한 화폐의 回歸運動에 관한 논리적 설명에 있으며, 이를 굳이 이름 붙인다면 貨幣의 '理論的 起源'에 관한 해명이라 부를 수 있다. 즉 이미 동질화과정을 분석의 전제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사회화과정을 '단순한 가치형태'로부터 '화폐형태'까지로의 전개과정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반복하지만 이러한 전개과정의 추동력은 사회화의 내적 논리만으로 완전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아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135-090 서울 강남구 삼성동 78
전화: (02) 519-6225
팩시: (02) 544-9204

參 考 文 獻

金秀行(1988): 『政治經濟學原論』, 한길사.

柳東民(1994): "價値와 價格의 量的 聯關에 대한 檢討,"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편, 『經濟論集』 **33. 3**.

李相憲(1994): "마르크스의 抽象勞動 槪念에 關한 硏究," 서울대학교 경제학석사 학위논

문.

이채언(1990): "가치개념의 새로운 확립을 위하여," 한국사회경제학회 연구논문집, **9009**.

_____ (1994): "노동가치이론에서의 몇 가지 쟁점: 답변을 위한 비판," 『경제와 사회』 겨울호.

정운영(1994): "변명을 위한 변명," 『이론』 **8**.

홍 훈(1994): 『맑스 경제사상의 구조와 한계』, 한울.

황태연(1996): 『지배와 이성』, 창작과 비평사.

小幡道昭(1988): 『價値論の展開』, 東京大學出版會.

伊藤 誠(1995): "The Labour Theory of Value for Socialism," 研究年報 『經濟學』(東北大學) **56. 4**.

Aglietta, M., and A. Orléan (1991): 『貨幣の暴力』(井上泰夫・齊藤日出治 譯), 法定大學出版局.

Akerlof, George A. (1970): "The Market for 'Lemons' :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4**.

Bidet, J. (1989): 『資本論をどう讀か』(今村仁司 譯), 法政大學出版局.

Bowles, S., and H. Gintis (1977): "The Marxian Theory of Value and Heterogeneous Labour: A Critique and Reformulation,"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 2**.

Carchedi, G. (1991): *Frontiers of Political Economy*, Verso.

Dixon, W., and G. Kay (1995): "Marx's Theories of Value: a Response to Cartelier and William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9, 4**.

Eldred, M., and M. Hanlon (1981): "Reconstructing Value-Form Analysis," *Capital & Class*, **13**.

Heide, Holger(1993): "자본의 전략변수로서의 민족: 마르크스의 가치이론에 근거한 비경제주의적 해석"(강수돌외 번역), 『이론』 **6**.

Hunt, E.K. (1983): "Joan Robinson and the Labour Theory of Valu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7, 3-4**.

Itoh, M. (1988): *The Basic Theory of Capitalism*, Macmillan Press.

Krause, U. (1982): *Money and Abstract Labour*, Verso.

Lipietz, A. (1985): *The Enchanted World: Inflation, Credit and the World Crisis*, Verso.

Lippi, M. (1979): *Value and Naturalism in Marx*, New Left Books.

Marx, K.(1989) : 『資本論』I(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_____ (1990) : 『資本論』III(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Morishima, M. (1973): *Marx's Econom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uten, G., and M. Williams (1989): *Value-Form and the State*, Routledge.

Roemer, J.E. (1978): "Differentially Exploited Workers: A Marxian Theory of Discrimination,"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10, 2**.

Samuelson, P. (1971): "Understanding the Marxian Notion of Exploitation: A Summary of the So-Called Transformation Problem between Marxian Values and Competitive Pric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9**.

Steedman, I. (1977): *Marx after Sraffa*, New Left Books.

Weeks, J. (1981): *Capital and Exploitation*, Edward Arnold.